

영월 남면 태양광발전소 건설 임금체불 논란

중장비 업체 등 군청 앞 집회
식대·숙박 포함 6880만원 체납
S건설 “해결 방안 찾아보겠다”

영월 남면 태양광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6000만원대의 식대비와 숙박료, 중장비 이용료 등이 1년여가 넘도록 체납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남면 연당리 우리식당과

동베이펜션, 중장비업체 등은 지난 12일부터 군청 앞 도로에서 집회를 하며 영월군이 발전소 지분 11.85%를 갖고 있는 만큼 해결 방안을 마련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내달 6일까지 집회를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하도급업체인 S건설 관계자들이 이용한 우리식당 식대비는 1750만원, 동베이펜션 숙박료는 2360만원, 덤프 3대와 굴삭기 1대 이용료는 900여만원 등 체납액은 모두 6880여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체납액이 커서 영세한 살림

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나 현재 S건설과는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영월군이 발전소 지분 11.85%를 갖고 있는 만큼 해결 방안을 마련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내달 6일까지 집회를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발전소 운영 주체인 영월에너지스테이션 관계자는 “공사 원청업체인 G건설 등에 공사비는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책임은 원청과 하도급업체에게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피해

자들에게 원청과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직불 동의서와 채무금액 확정 서류 구비 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S건설측은 “영월에너지스테이션과 G건설에게 추가로 받을 공사비가 있는 만큼 향후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해명했다.

영월군 관계자는 “행정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며 “다만 영월에너지스테이션측에 공문을 보내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기준

김현미 “건설분야 임금체불 근절 위해 공공사업 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 검토”

직접시공제도 확대 계획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건설분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공공사업’의 발주자가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

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13일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김 후보자는 “건설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면 임금체불 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공공사업에 발주자의 임금 직접 지급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모든 건설산업에 일률적

용은 어려움이 있다”며 “민간부문에서는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원도급자의 임금 직접 지급을 유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직접시공제도’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직접시공제도는 실효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직접시공제 확대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관석 의원은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와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를 위해서는 직접시공제, 임금 직접지급제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김 후보자의 의지를 확인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성증기자 kwon88@